

# 민주 '김건희·명태균' 통화에 "특검법 통과시 즉시 공포"

노종면 "특검할 이유 차고 넘쳐" "검찰 부실수사 입증 계속 나올 것" 국힘 "정치권 전체 만능 수사법" 거부권 요청키로... 상법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공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 녹음이 공개된 것을 두고 "국회가 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해 통과시키면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법무부 등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입장을 낼 수 있는 모든 주체들은 합구해야 한다. 다 공동의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24일) 시사주간지 시사인은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와 명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 여사와 명 씨가 약 1분간 나눈 통화 녹취에는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하루 전날인 2022년 5월9일 명 씨에게 "당선인(윤 대통령)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김영선을) 밀으라고 했다"고 언급한 내용이 담겼다.

김 여사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하고 윤한홍 (의원)이 반대하잖아요 그렇죠?"라고 했고, 명 씨는 "당선인의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이를 압박했던 것 같더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여사는 "하여튼 너무 걱정 마세요. 잘 될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명 씨 통화) 녹취 육성이 공개될 때 그 대화에 가려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나름 충분히 드렸었다.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전화를 했다는 점도 설명을 드렸다"며 "그와 관련된 당사자의 증언도 일치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날의 통화 흐름을 보면 통화가 이뤄지기 전에 이준석 대표로부터 공천 상황에 대한 연락이 왔고, 명 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하고 이어서 김 여사가 확인하는 전화를 해준 것"이라며 "이미 몇 달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검찰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앞으로 검찰의 부실수사, 은폐 기도를 입증해줄만한 상황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시도라도 했다. 특검을 해야 할 이

유는 차고 넘친다"라며 명태균 특검법의 조속한 통과·공포를 촉구했다.

특검법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지난해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하고 공천 거래를 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이고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 경영에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법률 비용만 폭증할 확률이 있다"며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성급하게

일방 통과돼 정밀 유감"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전날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상범 의원이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상법개정안 대안으로) 인수합병(M&A), 물적 분할 시 소수 주주 보호 조치를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의의 중임에도 무리하게 상법을 개정하고, 상대 정당에 대한 표적 수사를 위해 27번째 특검법을 낸 민주당의 목표는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라며 "경제와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두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 헌재,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내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문제로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27일 선고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잡힌 이날 양측 대리인단에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우 의장이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을 문제 삼아 지난달 3일 청구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변론기일을 잡고 당초 이달 3일 선고를 할 계획이었으나,

최 권한대행 측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당시 선고기일을 따로 잡지 않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전에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질 경우 증거 기록을 다시 파악하는 변론갱신절차로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이런 변수는 해소된 것으로 보는 해석도 나온다.

법관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선고에도 뒤늦게 임명된 마 후보자가 참여하지 않고 '8인 체제'로 선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헌재가 국회의 청구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나도 최 권한대행이 이를 따를지는 아직 미지수다. 뉴스

## 민주 체육특별위원회 공식 출범... 위원장에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체육특별위원회가 25일 국회에서 '회합으로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스포츠 미래'라는 구호 아래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 체육특위는 이날 조선대 스포츠 산업학과 김민철 교수 등 체육 현장 전문가 25명을 부위원장직으로 위촉하고, 비전과 체육 정책 등을 공유했다.

당 체육특위는 조계원(여수·사진)·강신성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당내 상설 특별위원회로 체육 발전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 조계원 공동위원장은 "생활 체육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전문 체육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들도 살펴볼 것"이라며 "시니어 레포츠 확산에 맞춰,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는 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조인철, 이동통신 장애 고지 의무화법 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 갑·사진)은 25일 통신 장애 발생 시 기업이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이동통신 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시정행에 불과해 강제력이 약하고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장애 사실 미고지 시

과태료를 최대 5000만 원까지 부과하고, 장애의 원인·복구 예상 시간·고객센터 연락처·손해 배상 기준 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법적 미비로 인해 장시간 인터넷 장애가 발생했지만, 이용자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25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 與, 공수처 질타... 野, 비화폰 수사 촉구

### 내란 국조 마지막 청문회

국회는 25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마지막(5차)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5차 청문회에서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부실하다고 질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비상계엄 모의 과정 등에서 쓰인 의혹이 있는 비화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오동은 공수처장을 향해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대통령)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는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다"며 "이런 선례를 남겨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수사받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도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과 대통령 및 국무위원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며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영장 쇼핑'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사퇴 후 일주일 넘게 지난 12월 12일 또는 13일에 반납했다"며 "대통령경호처에 해당 비화폰이 보관돼 있으니 이를 입수하면 주요 임무 종사자 간 통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선원 의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건희 여사 간 문자메시지 소통을 거론하며 "김 여사가 조 원장에게 (계엄 상황에서) 명태균에 대한 감시 등을 요청했을 수 있으니 비화폰 통화 기록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특위는 동행명령에 불응한 증인들의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달 22일 1차 청문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한 특위는 경호처가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정황, 계엄 당시 수방사 B1 병에게 50명가량의 구금을 검토한 의혹 등을 확인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과 문·노 전 사령관 등 핵심 증인이 불출석한 탓에 비상계엄 관련 진상의 핵심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김선욱 기자

## 與 "자동조정장치 수용을"... 野 "연금 삭감장치"

### 연금 개혁 놓고 이견 여전 원내대표 회동 26일로 연기

여야는 25일 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조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모수개혁 이후 구조개혁 단계에서 논의하지는 입장이다.

소득대체율을 두고 정부는 42%, 더불어민주당은 44%, 국민의힘은 절충안 격으로 43%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나서 국민연금 개혁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회동은 26일로 미뤄졌다. 서울=김선욱 기자